

종합·해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 2006년 6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한 지 3년 만에 지금만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대우건설을 되팔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역 근처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빌딩(옛 대우빌딩). /연합뉴스

대우건설 다시 매물로... 누가 인수할까

LG·포스코·롯데 등 관심 産銀 사모펀드에 되팔수도

대우건설이 3년만에 다시 매물로 나오며 따라 이 회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은 28일 "구체적인 매각 방식은 주채권은행과 매각자문사 등과 협의해 해보아겠지만 대우건설에 관심있는 제3의 인수자와 산업은행 사모펀드(PEF)중 유리한 곳에 회사를 넘기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상황이 좋지 않지만 제3의 인수자를 찾는다면 산업은행의 사모펀드(PEF)에 넘기는 것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의 경우 2008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1위의 종합건설업체로 토목, 플랜트, 건축, 주택 등 다방면에서 건설업계를 리드하고 있어 건설 계열사가 없거나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회사를 중심으로 관심을 보일 수 있다.

현재 대우건설 인수 가능 기업으로는 당사자 의사와는 무관하지만 LG 그룹과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효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LG그룹의 경우 얼마 전에도 "대우건설 인수에 관심이 없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3년 전 GS그룹과 계열 분리 당시 상대방의 주력사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한 신사협정이 다음달 1일부터 해제되기 때문에 건설업 진출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제계의 시작이다.

또 포스코, 롯데그룹, 효성 등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 각각의 계열 건설사가 하지 못하는 플랜트, 원자력발전 등 대형 공공공사 수주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업계는 예측한다.

하지만 최근 경제여건과 시장상황이 나빠 과연 덩치가 큰 대우건설을 '빛을 내' 살 기업이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제3의 인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결국 대우건설은 산은의 사모펀드로 팔려나 뒤 또다른 인수자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 경영권을 사모펀드로부터 다시 넘겨받는 우선매수권 '바이백(Buy-back)' 옵션이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국내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외 투자자에게 매각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을 어느 쪽에 팔든 매각에 따른 손실이 따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금호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한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주당 2만6천262원이었으며 당시 대우건설의 주가는 1만8천원 안팎이었다.

반면 금호가 대우건설을 팔아야 할 시점인 현재 대우건설의 주가는 1만3천원에도 못미친다.

또 건설경기가 2006년처럼 좋지 못하고, 또다른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도 매각을 앞두고 있어 인수대금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3자 인수든, 산은의 사모펀드든 금호가 대우건설을 샀던 가격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손절매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풋백옵션 해제 해를 위해 대우건설을 서둘러 팔 경우 '할매 매각'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매각과 무관하게 대우건설 인수 당시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에게 약속한 풋백옵션에 대한 책임도 여전히 져야 한다. 이 경우 대우건설 주가가 올 연말까지 3만2천원으로 오르지 않으면 대우건설 매각 대금으로 풋백옵션을 해제해야 한다. /연합뉴스

사교육과 전쟁

당·정·청 실무회의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사교육 폐해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당·정·청은 여권 핵심인사들이 참여하는 사교육 관련 실무회의를 구성, '사교육 억제,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한 사교육 관련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28일 밝혔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앞으로 당·정·청 인사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가 가동돼 사교육 폐해 근절 대책 초안을 마련한 뒤 당정책회의,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회의에는 한나라당 최구식 6경조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김정기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 그룹격인 안국포럼 출신인 정두언 의원, 광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26일 당 여의도연구소와 함께 사교육 관련 토론회를 개최, 사교육 문제 제기를 주도했다. /연합뉴스

F1 특별법 '대치 국회' 희생?

한나라 단독 개회면 6월 국회 통과도 장담 못해

지역 정치권·전남도, 물밑 접촉 등 대책 필요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법 대치'로 6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F1(포플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의 본회의 통과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를 강행하고 이에 맞서 민주당이 장의 투쟁 등에 나선다면 F1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물밑 접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은 29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미디어 관련법 등을 상임위에서 심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석수에서 앞서는 한나라당이 30일 상임위에서 각종 법안을 표결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겨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야권 공조를 통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방침

이다. 상임위부터 실력저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미디어 관련법의 본회의 통과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 개회가 이뤄진다면 F1 지원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F1 지원법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점에서 6월 접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6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야권의 장의 투쟁이 현실화된다면 여야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F1 지원법의 장기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F1 지원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보다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의 극적인 협상 타결로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본회의에서 F1 지원법이 무사히 통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단독 본회의 개회가 현실화 된다면 F1 지원법의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즉,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에서 한나라당 지역 출신 의원들은 물론 지도부 인사들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한나라당 단독 국회가 열리더라도 F1 지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 단독으로 과행 운영 된다면 민생 현안 법안이 아닌 F1 지원법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며 "한나라당 단독 국회가 열리더라도 F1 지원법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한나라당과의 물밑 접촉에 나서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고소득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더 낸다

납입 상한기준 상향... 年 20만~90만원 ↑

15년만에 월소득 360만원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80만명 가량의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입부담금이 내년 부터 연간 20만~9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종업원을 대신해 50%를 내야하는 기업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또 앞으로는 매년 연금 납부 기준액이 소득 변동률과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달라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현재 22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된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하한선과 납입기준액 산정방식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내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내역, 방법, 적용시기를 결정할 예정인데 내년 시행이 유력하다. 국민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

준 월소득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2번째이다. 95년에는 당시 220만원이었던 월소득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상한 소득구간인 345만원 이상 가입자는 188만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월소득 상한액을 정했던 95년에 비해 국민 평균소득이 많이 늘어났고 은퇴후 받을 연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연금 납부 상한액 조정은 직장 및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정이 결정될 것"이라며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폭적인 조정은 피하고 월 소득대비 납입 비율도 현행 9%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5년간 소득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따지면 상한액이 400만~450만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 납부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액의 9%를 개인과 회사가 절

반씩 부담하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연금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360만원이어서 직장인은 16만2천원, 개인사업자는 32만4천원을 냈지만 일례로 상한이 400만원으로 바뀌면 직장인 납부액은 18만원, 개인사업자 36만원, 450만원으로 변동되면 직장인 20만2천500원, 개인사업자 40만5천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연간으로 보면 직장인은 25만~40만원, 개인사업자는 50만~90만원 가량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당해연도의 물가상승률과 기준 소득층의 임금인상률 등에 따라 연금 납부 월소득 상한선을 연동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안과 적용시기를 검토 중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월 납입금이 늘어나더라도 은퇴 후에 그만큼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자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Hwangkeum Sangwon' (황금상권) in Unam-dong, Lotte Mall. Features a large building image and text: '교통요지 대로변 최고의 "황금상권"', '확! 달라진 분양 임대조건!!', '고객중심의 평형대분양·임대 가능!', '1F 카페숍(시애틀) 입점', '2F 맥집(에다촌) 입점', '4F 수학학원 2곳 입점', '5F 교육연구시설 확충', '6F 실내스키링크드 성당'. Includes contact info: 571-5600, 511-7878.